

더 멀어진 4자협의체 가동...더 꼬이는 광주 군공항 이전

전남도 불참 선언후 묵묵부답
국방부·국토부 담당 간부들
정기인사로 대부분 물갈이
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무산
광주시 “조속히 재가동해야”

새해벽두부터 광주·전남지역 숙원사업인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사업이 더 꼬이는 모양새다. 정부 부처를 설득해 어렵게 만든 '국토부-국방부-광주시-전남도' 4자 협의체 가동이 전남도의 불참선언으로 중단된 상황에서, 공항 이전 사업에 호의적이던 정부부처 간부들마저 정기인사로 줄줄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 지난해 연내 통과를 기대했던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광주시는 조만간 정부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해 4자 협의체 유지와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 개정안 등을 건의하고 공항 이전 사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국토부 등에서 이미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냉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정기인사에서 국장급인 군공항이전사업단장과 이전총괄과장 등 군 공항 이전 관련 핵심 간부들을 교체했다. 교체된 간부들은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을 위한 4자 협의체 구성에 힘을 보탤 이득이다. 이들은 전남도가 4자 협의체 불참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공항 이전 사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이전 사업의 또 다른 축인 국토부에서도 조만간 있을 정기인사에서 공항이전 관련 담당 간부들의 교체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4자 협의체 구성의 주축을 맡아 공항이전 사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이 광주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이전 사업 등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이면서 4자 협의체 구성 등이 탄력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토부장관이 바뀐 이후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사업에 국토부 내의 분위기가 다소 냉랭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4자 협의체 구성의 정부 주무부처 담당 간부들이 정기 인사를 맞아 교체되면서, 당분간 4자 협의체 구성이나 활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임 간부들이 다시 4자 협의체 구성의 타당성과 활동 범위 등에 대해 이해하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려면 수개월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업무 성향에 따라 책임이 뒤따르는 4자 협의체 구성 자체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여기에 전남도가 지난해 말 '4자 협의체를 통해 민간공항 이전과 군공항 이전을 묶어 추진하자'는 광주시의 제안에 반발, 4자 협의체 참여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점도 악재다. 전남도는 새해가 시작됐지만, 4자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15일 '민선 7기 광주시가 약속했던 2021년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 계획을 지킨다면 4자 협의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4자 실무협의체는 국토부 주관으로 국방부와 광주시, 전남도 참여 아래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주민 수용성 지원책 마련을 위해 꾸려졌지만, 지난해 11월 첫 회의를 가진 이후 광주 민간공항 이전 방식을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갈등을 겪으면서 전면 중단됐다. 당시 지역사회에선 그동안 뒷집만 지고 있던 중앙부처까지 처음으로 참여하는 실무협의체가 구성됨에 따라 답보 상태에 놓인 군공항 이전 사업도 새 국면을 맞을 것이라며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새 군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개발해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을 담은 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광주와 함께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수원과 대구 등이 지난해 연말까지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군공항 지역과 이전 지역간 입장차가 크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새해가 시작된 만큼 광주·전남의 미래가 걸린 (군·민간 공항) 이전 사업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새롭게 바뀐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4자 협의체 회의를 다시 진행하는 것을 첫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민사회단체는 6일 논평을 내고 아특법 개정안 1월 임시국회 통과 불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시아문화전당 야경. <광주일보 자료>

“아특법 1월 임시국회 처리 불발...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져야”

광주 80개 문화시민사회단체 논평
“문화전당 이미 법안화 절차 움직임”

광주시민사회단체는 “여야가 합의 통과시켜야 할 아시아문화전당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이 1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광주지역 8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연명으로 논평을 내고 “1월 임시국회에서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 아특법에 의해 문화전당은 자동적으로 아시아문화원으로 업무 위탁이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실제로 문화전당은 해당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전까지

는 이처럼 두 가지 상반된 상황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초 현행법에 따른 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 법안화 시점은 올해 1월로, ‘관련 단체나 법인에 완전 위탁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활동도 정지될 수밖에 없으며 혼란과 행정력의 낭비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현재 문화전당은 장기간의 전당장 직무대행 체제, 직제와 전문 인력의 대폭 축소,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기능 및 업무 중복으로 인해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전당의 법안화를 시도하고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문화전당을 지목하면서 예견됐었다.

시민사회단체는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1월 임시국회가 폐회되면 여야가 차기 대선의 바로 미터

인 4월 보궐선거 체제로 전환되면서 격렬한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차질 아특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안 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 힘 문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기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결단을 해줄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현 상황을 도래하게 만든 일차적인 원인은 국민의힘 문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방만한 태도와 정치적 부재를 드러낸 지역의 정치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불발돼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대한 합당한 후속조치도 취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이재명 지사 “전직 대통령 사면, 국민 뜻 따라야”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기한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5일 JTBC 신년토론에 출연해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이라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가치는 합의된 것은 지키고 힘이 있든 없든 위반에 대해서는 충분한 책임을 지도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독일은 지금도 나치 전범들을 추적해

처벌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참 용이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형사 처벌의 목적은 응보와 예방인데 두 조건 모두 충족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통치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대통령께 맡기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국민통합 카드로 사면을 쓴다면 굳이 반대할 마음은 없다”면서도 “온 나라가 분열되는데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고뇌와 결단이 있어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MB·박근혜 사면, 찬성 47.7%·반대 48.0%

리얼미터 여론조사... 호남 반대 76.6%, 부울경 찬성 66.6%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에게 조사한 결과,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7.7%, 반대는 48.0%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4.3%였다.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찬성 66.6% vs 반

대 29.4%)과 대전·세종·충청(58.3% vs 37.4%), 대구·경북(56.8% vs 31.3%)에서 찬성 여론이 절반을 넘었다. 광주·전라(19.3% vs 76.6%)와 인천·경기(39.6% vs 57.1%)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다. 서울은 찬성 49.0%, 반대 47.6%로 갈렸다.

연령별로는 60대(68.1% vs 28.8%)와 70세 이상(68.1% vs 29.5%) 등 고령층은 다수가 찬

성 의견이었다. 40대(31.5% vs 63.7%)와 30대(35.9% vs 59.1%), 20대(42.4% vs 51.6%)에서는 반대가 더 많았다. 50대는 찬성 48.2%, 반대 48.0%로 엇비슷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사면 반대 응답이 88.8%로 압도적이었던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81.4%에 달했다. 보수층은 찬성(67.5%)이, 진보층은 반대(75.1%)가 각각 우세한 가운데 중도층에서는 찬성(51.0%)과 반대(43.5%)가 오차범위 이내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